"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특별법 제정 적극 나설 것"

"인센티브 줘서라도 전기차 완성기업 광주 오게 하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높이 평가하고, 전기차 완성기업이 광주에 오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인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의 친환경차산업 육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이들 사업에 순풍이 불 전망이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기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홍영표 위원장이 초청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이기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지도위원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및 간부 등 노동계 인사 50명,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남헌일 광주상공회의소 상임이사,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최봉규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장, 백석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서옥희 광주YWCA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자 '답'과도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100년이 넘는 미국, 유럽의 자동차 역사를 뛰어넘기 위해 전기자동차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친환경자동차 사업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향후 전기차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가 위대한 결단을 내려 광주의 50년, 100년의 비전을 만드는데 함께 한 것이 바로 광주의 강점이며 이 점을 정부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노·사·민·정 연대만 제대로 유지된다면 국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예산 확보,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 성사 시키겠다"면서 "특히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줘서라도 완성차 업체가 광주로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세계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를 잡은 만큼 관련 산업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한층 격화될 것이다"고 예상하고 "하지만 광주가 노동, 경제, 시민사회 등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광주형 일자리'라는 엔진을 장착한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동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지를 함께 고민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시장은 이날 홍 위원장을 광주형 일자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노사민정 광주형일자리 성공기원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성공기원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공짜 없어요 음료·다과 비용도 받아요"

전남도, 24일부터 국감 … 청탁금지법에 의전 줄어

"국감 중 내놓는 음료와 다과 등 간식비용도 받아요."

국정감사때마다 감사위원 의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전남도 등 피감기관들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숙박이나 만찬 등을 감사반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감사반장인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11명 의원이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감사반은 전날인 23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마치고 영암의 한 호텔에서 숙박한 뒤 다음달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호남 홀대, AI(조류인플루엔자),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대책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른 호남 홀대 논란과 관련, 여·야 의원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번 국감에서 ▲지역 낙후도를 감안한 재정분권 추진 ▲도서개발 확대 및 여객선 운임 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측정단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량 포함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감사위원들에 대한 거추장스런 의전은 사라졌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피감기관에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숙식비는 국회에서 자체 해결한다.

전남도는 숙박 장소를 '소개만' 했으며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있을 24일 오찬도 '준비만' 한다. 전남도는 1인당 2만원선 음식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감 중 음료와 다과 등 간식도 제공 후 비용을 받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20만원 상당 간식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행안위에서 고사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침 식사용 김밥을 준비하지 않아 국감 분위기가 냉랭했던 때도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의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약지 응급 협진시스템' 광주시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19일 "제주에서 열린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온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생활권 선도사업 139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집행, 성과 등을 심층 평가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13개 자치단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광주시의 '취약지 응급실 원격 협진 시스템' 사업은 지난 2014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2016년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전국단위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오늘 장흥서 개막

무료 검진·의료 서비스 체험

전국 최대 참여형 건강박람회인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20일 장흥에서 개막한다.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7일간 열리며 무료 검진과 각종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건강한 치유·건강한 삶이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현대의학 통합의학관, 한의학 통합의학관, 보완대체 통합의학관, 건강 100세관, 꿈나무 건강증진관, 의료산업·특산물관 6개관과 약초 테마공원, 건강강좌, 쉼터, 건강음식관 등 6개 부대 행사장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국제대회 등 7차례 개최 경험을 살려 전시 위주가 아닌 관객이 주제가 돼 직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건강박람회로 치러진다.

또 지난해 국제박람회에서는 입장권을 가지고 출입했지만, 올해는 입장권 없이 모든 검사와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와 연계해 개원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에서 예비진료를 한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국가 지원을 받아 사업비 252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통합의학 연구, 교육, 치유시설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도입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원 100명 이상의 광주시 산하 4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또 100명 이하 17개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9일 김용집(비례)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기업과 공기관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이사제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은 광주시도시공사(250명), 광주시도시철도공사(577명), 광주환경공단(271명), 광주복지재단(114명) 등 총 4개 기관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Good Air City' 인증도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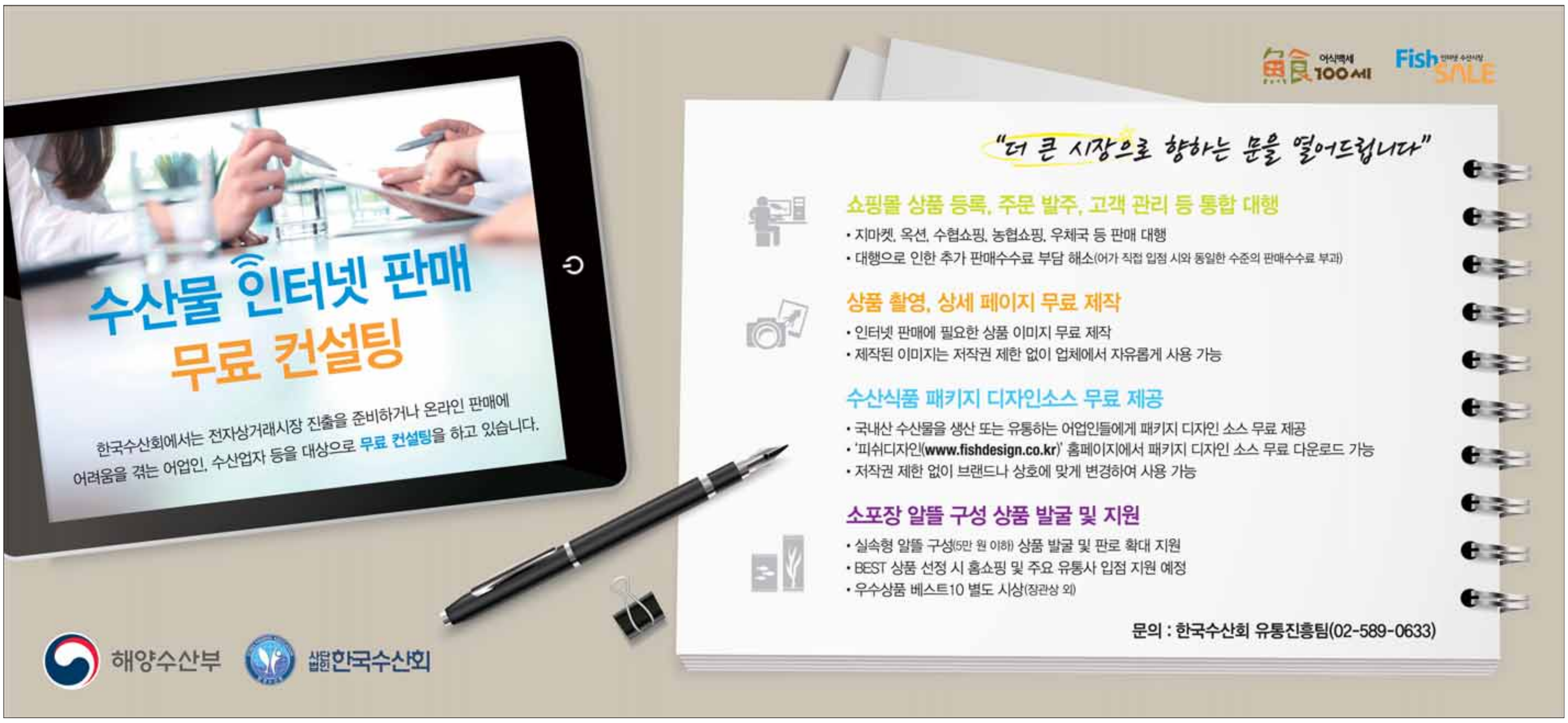
친환경 차·탄소은행제 운영 성과… 광역단체론 유일

광주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Good Air City' 인증도시로 선정됐다.

'Good Air City(맑은공기 모범도시)'는 조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미래 환경도시의 모범을 제시한 도시를 선정, 인증한다. 평가 기준은 최근 3~5년간 대기질 개선 정도, 공기질 관리정책 우수성, 개선노력 등이다.

시상식은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 세계맑은물공기연맹이 주관하는 '제8회 공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3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보급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 탄소은행제 운영 ▲그린빛물인프라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광주온도 섭씨 1도 낮추기 프로젝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공기산업육성 등 대기질 관리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248대), 수소차 보급(24대),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부터는 빛그린국가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주의 산업지도를 친환경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해왔다.

또 시민생활 교통환경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천연가스(NGV) 자동차 보급(1490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2817대), 엔진개조 지원(LPG전환, 1427대), 저감장치 부착(2817대) 등을 지원해왔다. 시는 2018년에는 어린이통화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등에 53억원을 지원, 수송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